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교육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위반 추가 등 〉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57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추가 .....   | 2  |
|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과 다른 죄의 벌금형 분리 선고 ..... | 1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4. 8. 13.
3. 회부연월일: 2024. 8.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추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 | 제10조의4(결격사유) -----<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9년 125명에서 2021년 8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24명 수준이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교원은 2023년 기준으로 6명이고 이 중 2명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1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음.

[표 1]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불문경고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정직~파면) | 합계  |
|------|------|------------|------------|-----|
| 2019 | 27   | 75         | 23         | 125 |
| 2020 | 21   | 54         | 25         | 100 |
| 2021 | 15   | 49         | 23         | 87  |
| 2022 | 24   | 79         | 13         | 116 |
| 2023 | 24   | 77         | 23         | 124 |

자료: 교육부

[표 2]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벌금형      |          | 징역형 | 합계 |
|------|----------|----------|-----|----|
|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
| 2019 | 4        | 2        | 2   | 8  |
| 2020 | 3        | 2        | 1   | 6  |
| 2021 | 1        | 1        | 1   | 3  |
| 2022 | 1        | 0        | 0   | 1  |
| 2023 | 3        | 2        | 1   | 6  |

주: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규정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의미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자료: 교육부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교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한 사람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보호가 두터워지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sup>1)</sup>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sup>2)</sup> 헌행법 및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통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제10조의4에서 결격사유<sup>3)</sup>를 규정하여 이

1)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제2호),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제3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4호)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함.<sup>4)</sup>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주요 내용<br>(헌법재판소, 2016헌마754, 2019.7.2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b> 해당 조항은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것으로,</li> <li>· <b>(침해의 최소성)</b>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상담을 하고 인성발달의 기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를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li> <li>· <b>(법익의 균형성)</b> 성범죄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보다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li> </ul> <p>⇒ 해당 조항은 <b>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b></p> |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6헌마754, 2019.7.25.)

또한 헌법재판소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제3호)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sup>5)</sup>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주요 내용<br>(헌법재판소, 2019헌마502, 2020.12.2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해당 조항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의 성도덕을 제고하고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li> <li>· (침해의 최소성) 교원은 학생에 대하여 입학, 수업, 시험출제, 성적평가에서 졸업 후 사회진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학생은 교원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li> <li>· (법익의 균형성) 성범죄자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보다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li> </ul> <p>⇒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p> |

다만,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해당 조항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지만 하면 일률적으로 영구히 교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위헌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 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5)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9헌마502, 2020.12.23.)  
: 재판관 4인 기각, 5인 헌법불합치

또한 헌법재판소는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관련하여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sup>6)</sup>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주요 내용<br>(헌법재판소, 2017헌마130, 2018.6.2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해당 조항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나,</li> <li>· (침해의 최소성)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중 10년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며,</li> <li>· (법익의 균형성) 이와 같은 제한은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br/>⇒ 해당 조항은 <b>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b></li> </ul> |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판결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개정되었음.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7헌마130, 2018.6.28.)

[표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개정 규정 비교

| 법률 제14925호, 2017.10.24. 개정                                                                                                                                                                                                                                                         | 법률 제15889호, 2018.12.11. 개정                                                                                                                                                                                                                                                                                                                                                                                                                                                                               |
|------------------------------------------------------------------------------------------------------------------------------------------------------------------------------------------------------------------------------------------------------------------------------------|----------------------------------------------------------------------------------------------------------------------------------------------------------------------------------------------------------------------------------------------------------------------------------------------------------------------------------------------------------------------------------------------------------------------------------------------------------------------------------------------------------|
| <p>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p> <p>① <u>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u></p> | <p>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u>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u>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p> |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와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대한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교의 교원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사안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냄.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부분으로, 이와 같은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4] 교육공무원 임용 제한 등 관련 규정 비교

| 구분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br>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br>채용의 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br>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
| ①<br>제한<br>내용 | · <u>교육공무원</u> 임용 불가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u>교원</u> 으로 <u>채용 불가</u>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b>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b> 다음의 기관에 <u>운영·취업 등 제한</u><br>-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br>-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등                                            |
| ②<br>적용<br>대상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개정안)<br>-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b>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b>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br>* (현행 내용 생략) | ·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원(기간제교원, 강사 등 포함) 재직 중, 다음의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br>- 금품 수수(授受) 행위<br>-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br>-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 <u>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u><br>*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의2.<b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죄를 규정한 제71조제1항 포함)<br>-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 ③<br>적용<br>예외 | (없음)                                                                                                                                                          |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

자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아동복지법」 중 해당 조항 정리

① 결격사유에 따른 제한내용과 관련하여 개정조문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에는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해당되며,<sup>7)</sup>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sup>8)</sup> 개정안에 따른 적용범위에는 모든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되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과의 분리 필요성이 적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과 교원 이외의 교육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7)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 8)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은 채용이 제한되는 범위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결격사유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내용은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개정안의 심사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5]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 행위)제5호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법률안<br>(의안번호)      | 대표 발의자 | 발의일/<br>회부일              | 소관<br>상임위원회 | 주요 내용                                                                                                                                                                                                             |
|----|----------------------|--------|--------------------------|-------------|-------------------------------------------------------------------------------------------------------------------------------------------------------------------------------------------------------------------|
| 1  | 아동복지법<br>(제2200194호) | 정성국의원  | 2024.6.7./<br>2024.6.11. | 보건복지<br>위원회 |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정서적 학대행위의 유형으로 예시하여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                                                                                                                             |
| 2  | 아동복지법<br>(제2201443호) | 백승아의원  | 2024.7.5./<br>2024.7.8   | 보건복지<br>위원회 |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③ 결격사유 적용 예외와 관련하여 개정조문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는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 (학생교육 위축 우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생활지도의 구분이 모호한 현행 규정에서 지나친 결격사유의 확대는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원의 생활지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헌법소원 추이 주목) 아동학대죄 핵심 쟁점인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헌법소원이 제기됨(전국초등교사노조, 2023.8.18.자, 심리진행 중).
- (과잉 입법 우려) 교육공무원은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유·초·중·고교에 근무 등이 제한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 받고 있으므로 교직에서의 전면 배제 조치는 과도함(단, 현직 교원은 연수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파견 근무하도록 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교원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직무와 무관하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는 경우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li> </ul>                                                                                                                                                                                                                                                       |
| <p>○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불균형) 경미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까지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불균형 초래되고,</li> <li>- (교육의 위축) 학생지도나 교육활동 중에 발생 가능한 사소한 문제에도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게 되므로 교사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며, 학생의 교육기회 또한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li> <li>- (법적용 오남용) 벌금형에 대한 해석과 집행상 오류 및 남용 여지가 있으며,</li> <li>- (법적 명확성 부족) 개정안은 실제 구체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교직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li> <li>- (아동인권과 교권 간 균형 필요) 「아동복지법」이 오용되지 않도록 상호 균형을 찾는 보장이 필요함.</li> </ul> |
| <p>○ 충청북도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자격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li> <li>- 방임 등 소극적 대처까지 포함되는 아동학대 관련 정의가 모호하여, 심각한 교권침해 우려가 있음.</li> <li>-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에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li> <li>- 잘못된 법률 개정은 교직 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소극적 직업 역량만을 발휘하도록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함.</li> </ul>                                                                                              |
| <p>○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의(단, 정의 구체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벌금 500만원 이상은 비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 다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므로 구체화된 이후 적용될 필요가 있음.</li> </ul>                                                                                                                                                                                                                                                                |

##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과 다른 죄의 벌금형 분리 선고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죄와 다른 죄를 모두 범한 경우, 두 죄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죄에 따른 벌금액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br>「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br>1. (생략)<br>2. <u>제10조의4제3호</u> 에 규정된 죄 |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br>-----<br>-----<br>-----<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u>제10조의4제3호 또는 제5호</u> -<br>-----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의 금액은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등을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다액(多額)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sup>9)</sup>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벌금형이 경합범으로 판결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벌금형 금액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는 결격사유 중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6]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대상 죄의 내용

|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
|----------------------------------------------------------------------------------------------------------------------------------------------------------------------------------------------------------------------------------------------------------------------------------------------------------------------------------------------------------------------------------------------------------------------------|
| <p>• 「국가공무원법」</p> <p>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b>300만원 이상의 벌금형</b>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형법」</p> <p>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p> |

#### 9)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
|----------------------------------------------------------------------------------------------------------------------------------------------------------------------------------------------------------------------------------------------------------------------------------------------------------------------------------|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b>100만원 이상의 벌금형</b> 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br>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br>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 제2호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공무원법」</li> </ul>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br>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br>· 해임되거나 <b>100만원 이상의 벌금형</b> 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자료: 「교육공무원법」 등 해당 조항 내용

개정안 제10조의5제2호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제10조의4제5호가 신설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벌금형의 분리 선고 대상 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벌금형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공무원법」도 제33조의2에서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음.<sup>10)</sup>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9 |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